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서 정 우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엄 석 진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서 정 우

서정우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박 정 훈 (인)

부위원장 김 상 헌 (인)

위 원 엄 석 진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면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갈등은 갈등의 한 요소로 사람과의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갈등을 관리함에 있어 방향성 적립이 필요하다. 때문에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서 사회갈등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신뢰수준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2021년에 행해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3년과 2015년, 2017년, 2020년도에 대해 연도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도비교에서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모두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도에 따라 두 신뢰유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의 경우 2021년에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3년과 2020년에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반면, 정부신뢰는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신뢰의 경우 2020년의 경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 인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신뢰수준의 증가가 필수적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인식이 언제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사회갈등 인식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사회신뢰의 경우 시기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신뢰에 대한 정책 시행 시 연도별·시기별로 달리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신뢰의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정부신뢰에 치중된 행정연구에서 사회신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행복감, 사회갈등인식, 사회신뢰, 정부신뢰, 조절효과

학 번 : 2014-23503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 3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2. 연구방법 ·····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 5
제1절 사회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
1. 사회갈등 ····· 5
1) 사회갈등의 개념 ····· 5
2) 사회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 5
2. 사회갈등의 유형 및 원인 ····· 6
3. 사회갈등관련 주요 선행연구 ····· 8
1) 사회갈등 사례연구 ····· 8
2) 사회갈등과 공정성과의 관계 ····· 9
3) 사회갈등과 언론보도 ····· 9
제2절 신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
1. 신뢰의 개념 및 효과 ····· 10
2.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 10
3.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 11
1) 사회갈등과 신뢰 ····· 11
2)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차별적 효과 ····· 12
제3절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4
1. 행복의 개념 ····· 14
2. 행복이론: 상향확산이론 ····· 15
3.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16
1) 행복의 객관적 요인 ····· 16
(1) 인구통계학적 요인 ····· 16

(2) 환경적 요인 ····· 17
2) 행복의 주관적 요인: 심리적 요인 ····· 17
제4절 주요변수 간 선행연구 ····· 18
1. 사회갈등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 18
2. 조절효과로서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 ····· 2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2

제3장 연구설계 ····· 24
제1절 연구모형 ····· 24
제2절 연구가설 ····· 24
제3절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 26
1. 연구자료 ····· 26
2. 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 ····· 27
1) 종속변수: 행복감 ····· 27
2) 독립변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27
3) 조절변수: 정부신뢰와 사회신뢰 ····· 27
4) 통제변수 ····· 28
(1) 인구통계학적 변수 ····· 28
(2) 환경적 변수 ····· 28
(3) 심리적 변수 ····· 29
3. 분석방법 ····· 31

제4장 분석결과 ····· 32
제1절 기술통계분석 ····· 32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2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및 신뢰도 분석 ····· 33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 33
2) 주요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 35
제2절 주요변수의 서울 시민들의 집단간 수준 ····· 35
1. 서울시민들의 종속·독립변수에 대한 집단간 수준 비교 ····· 35

2. 서울시민들의 조절변수에 대한 집단간 수준 비교 ····· 38
제3절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 ····· 40
1.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 40
2. 사회갈등인식과의 상관관계 ····· 41
3.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 ····· 41
제4절 주요변수 간 위계적 회귀분석 및 연도별 비교 ····· 44
1. 주요변수 간 위계적 회귀분석 ····· 44
1) 1단계(Step 1) 해석 ····· 47
2) 2단계(Step 2) 해석 ····· 47
3) 3단계(Step 3) 해석 ····· 47
4) 4단계(Step 4) 해석 ····· 48
2. 연도별 위계적 회귀분석 비교 ····· 50
제5절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 54
1. 사회갈등인식과 행복감에서의 사회신뢰의 중요성 ····· 54
2.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55
3. 정부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56

제5장 결론 ····· 5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5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58
제3절 연구의 한계 ····· 60

참고 문헌 ····· 61
Abstract ····· 69

표 목 차

[표 1-1] 갈등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 7
[표 2-1]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차별적 효과 실증연구 ····· 13
[표 2-2] 사회갈등인식과 행복감에 관한 실증연구 ····· 20
[표 2-3] 신뢰의 조절효과 실증연구 ····· 22
[표 3-1] 변수의 측정 ····· 29
[표 4-1] 2021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2
[표 4-2] 2021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 34
[표 4-3] 2021년 주요변수의 신뢰도 분석 ····· 35
[표 4-4] 서울시 종속·독립변수의 집단간 수준(분산분석) ····· 36
[표 4-5] 서울시 조절변수의 집단간 수준(분산분석) ····· 39
[표 4-6]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43
[표 4-7]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요약 ····· 44
[표 4-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45
[표 4-9] 연도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53

그 림 목 차

[그림 1-1] 사회갈등과 공공갈등 ····· 6
[그림 3-1] 연구모형 ····· 24
[그림 4-1]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 49
[그림 4-2] 연도별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 52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헌법에 행복을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며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하였다.[1] 개념의 모호성과 포괄성, 범위의 중첩성 등으로 행복추구권은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정태호, 2006). 하지만 개인이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행복추구권인 만큼(장영수, 2017), 국가는 끊임없이 국민의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이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자 숙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매번 떨어지고 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013년에 156개국 중 41위, 2017년에는 155개국 중 56위, 2022년에는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했다.[2]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규모는 세계에서 12위 이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등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행복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가면서도 정작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지수는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설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발맞춰 최근 개인, 집단 간의 갈등이 온·오프라인상으로 표출되면서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 문제시되었던 영남·호남 간 지역갈등과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문제와 노사갈등, 노동유연화를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제도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여성운동과 미투운동은 남여 간 젠더갈등으로 번졌고, 최근 MZ세대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세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0조 최종방문 2022.08.24.)
2)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최종방문 2022.08.25.)

대갈등까지 사회갈등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다.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88.7%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최근 9년 동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2). 2021년 6월 영국 킹스컬리지에서 발간한 보고서(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에 따르면 빈부격차, 지지정당, 정치 이념 등 12개의 항목 중 7개의 항목에서 갈등이 ‘심각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2021)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지수는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반면, 정부의 이에 대한 갈등관리능력은 27위라고 분석했다.

갈등은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 요인이 유아기자녀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정미애 · 김효진,2022),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의 행복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명숙 외, 2013; 정해식 외, 2014).

하지만 사회갈등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물체가 서로 부딪칠 때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로 움직임이 멈추듯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갈등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려는 현대사회의 시간을 잠시 늦추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관습에만 머물렀던 생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인간이 성장과정 속에서 내적갈등을 겪어 내듯이, 사회갈등은 사회가 성장하면서 겪는 진통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감소시키기보다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실제로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보고, 행복추구권에 명시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인 신뢰, 특히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사회갈등 인식과 행복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사회갈등은 국가가 발전함에 있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따라 사회갈등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원상태로 복귀하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신뢰가 회

복탄력성으로서 사회갈등인식과 행복사이에 조절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사회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금세 국민의 행복수준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때문에 신뢰가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해 보고자하며, 특히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를 구분하여 그 효과가 차별적인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행복감에 있어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차별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회갈등을 배제하거나 일자리, 복지 등 투입적 정책만을 추구하는 등의 위생요인만을 제거할 것인지, 신뢰와 협의 등 사회자본 측면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면서도 갈등의 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층화집략추출법을 사용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한 서울서베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대표성 때문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가 밀집되어 있다.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만큼 인구통계학적 구성이 다양하고, 정치·경제·교육·문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및 시설이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서울시를 모집단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표본의 크기이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는 서울시의 20,00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40,000명)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베르누이의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설명하는 정확도는 올라간다(류희찬 외, 2013) .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로서, 2021년의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다. 추가적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2020년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

함으로써 2021년에 보이는 효과가 과거부터 지속적이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 행복, 사회갈등,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할 변수설정과 가설설정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각 변수들의 영향정도에 대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연도별로 비교함으로써 연도별로 위와 같은 효과들이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사회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갈등

1) 사회갈등의 개념

국립국어원 우리말샘[3]에서는 사회갈등을 “사회 내에서의 기관이나 권력의 투쟁.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충돌하는 사회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돌, 즉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집단의 목표인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을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생존경쟁으로 정의한 것이나(Sumner, 1960), 희소한 자원 및 가치에 대한 욕구를 둘러싼 양립 불가능한 투쟁이 사회갈등이라는 주장(Coser, 1956)도 결국 희소하고 한정된 자원, 재화로 인해 발생한 투쟁·경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갈등의 정의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갈등은 공공·정책갈등의 개념을 포괄한다. 사회갈등이란 개인 간 갈등이 집단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갈등을 말하는데, 공공갈등은 이러한 사회갈등 중에서도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갈등만을 의미한다. 즉 사회갈등 중에서도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와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이 공공갈등이며(김대중·오영석·왕서정, 2018), 대통령 시행령(대통령령 제21185호)에서도 공공갈등에 대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갈등과 공공갈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 1-1]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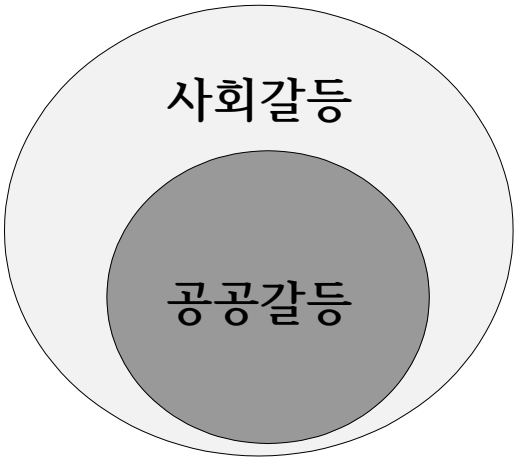
2) 사회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이러한 사회갈등에 대해 Robbins(2003)는 전통적 견해와 행태적 견해, 그리고 상호작용론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서, 사회갈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측면도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사회갈등에 대한 전통적

3)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

견해에 따르면, 사회갈등은 투쟁과 분쟁으로 점철되는 것으로 사회갈등을 부정적인 요소로만 정의하였다. 사회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지 못하면 사회적 대립과 분열, 분쟁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사회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권혁주, 2016). 행태적 견해는 전통적 견해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이며, 갈등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무작정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하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전통적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그림 1-1] 사회갈등과 공공갈등



-사회갈등: 개인간 갈등이 집단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갈등

-공공갈등: 공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상호작용론적 견해는 사회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행태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갈등은 기존의 관념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하고 집단을 결집시키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우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등의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갈등은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포한 것으로서, 갈등정도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를 할 수 있다면 조직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김태홍, 2005). 갈등의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에 따라, 사회갈등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 비리, 부패 등의 문제점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2. 사회갈등의 유형 및 원인

학술적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일반화된 구분유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이익갈등(interest conflict)과 가치갈등(Value conflict)로 구분할 수 있다

(kriesberg, 200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조원빈, 2016). 이익갈등은 한정된 경제적 자원의 배분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집단 간 이익추구의 갈등을 의미하며, 가치갈등은 정치와 종교적 신념,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다음의 표는 갈등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이며, 갈등유형은 대체적으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나뉘어진다.

[표 1-1] 갈등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학 자(년도)	갈등유형
Campbell(1996)	-개발갈등, 자원갈등, 자산갈등
Moore(2003)	-이해갈등, 가치갈등, 자원갈등, 관계갈등, 데이터갈등
갈등치유연구소(2012)	-이해갈등(노사갈등), 가치갈등(계층·이념·지역갈등)
국무총리실(2010)	-정책갈등, 이익갈등, 노사갈등, 개발갈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	-이익갈등, 가치갈등
서문기(2004)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환경갈등, 세대갈등
유희정·이숙종(2016)	-계층계급갈등, 공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윤인진(2011)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정부-주민갈등
윤종설(2014)	-가치갈등, 경제갈등, 제도·절차 갈등, 정치사회적 갈등, 환경갈등
조원빈(2016)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한국행정연구원(2016)	-빈부격차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개발·보존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종교갈등

사회갈등을 양립 불가능한 생존경쟁이라고 보는 것처럼 사회갈등 속에서 논의되는 자원 및 재화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분배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분배적 측면에서 사회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권혁주(2016)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들면서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발전만을 목적으로 특정한 기업과 분야, 지역만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자원을 제공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제일주의 · 개인주의 · 결과주의적 사회논리를 낳으며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행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구구조 및 가족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예산 및 자원이 점차 편중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1인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해체되면서 양육에 대한 기존의 관습적 개념도 퇴색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한 개념 논쟁부터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남녀 간의 갈등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IMF이후 경직된 고용구조가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구조로 만들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 및 불평등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갈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갈등의 역기능적 측면이 우리 사회에 도드라지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집단의 분열을 촉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발현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전영평 외. 2005). 또한 사회갈등이 온전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갈등을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갈등이란 빈부격차와 불평등, 세대 및 지역, 남녀갈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사회갈등관련 주요 선행연구

1) 사회갈등 사례연구

사회갈등에 대한 연구 중에는 대표적으로 사례연구가 있다. 사회갈등의 사례를 놓고 사회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사례연구는 주로 쓰레기 매립장, 발전소 등의 환경과 관련된 사회갈등 사례가 주로 논의되었다. 윤순진(2018)은 신고리 5·6호기 사례는 원자력발전 관련 갈등에서 우리 사회 최초로 시민참여 기반 숙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표성과 숙의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가 사회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덕화·구도완(2009)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해서 그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국회의 특별법 제정, 법원의 소극성, 정부와 삼성의 갈등의 제도화·회피화 전략으로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사회갈등의 강도는 약화되었으나, 대신에 문제가 공동체 속으로 내부화 되는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 정도는 약화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는 '피해자의 역설'이 현실화됨을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2) 사회갈등과 공정성과의 관계

사회갈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갈등과 공정성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임현철 · 은재호(2020)은 계급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과 불공정성이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며, 실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인식 수준이 낮아질수록 사적 · 공적 소통수준이 낮아지며, 갈등인식수준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사적 · 공적 소통수준의 증가할수록 갈등인식수준은 낮아짐을 확인함으로서 사회갈등의 인식수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적 · 공적 소통수준의 향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건(2015)는 공정성이 증가할수록 사회갈등이 해소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기회의 공정성이 사회갈등 해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분배의 공정성, 조건의 공정성 순으로 사회갈등 해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사회갈등과 언론보도

언론학에서는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언론보도와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정용국 외(2014)는 사회갈등 보도의 선전성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갈등 보도가 선정적일수록 수용자들은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동일한 종류의 사회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재경(2008)은 한국 언론사의 뉴스를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의 언론보도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확하고 편향된 보도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언론의 영향에 따라 부정적 보도관행을 극복하고 취재보도 체계상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등의 사회갈등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연구(김동규, 2000)가 이루어졌으며, 사회갈등 보도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함을 강조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강내원(2002)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뉴스보도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루어져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프레임은 ‘정책의 비효율성’, ‘개발’, ‘환경보호’, ‘국민부담’, ‘사업의 경제성’, ‘사회적 합의’ 등의 6개 프레임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개발과 환경보호 프레임, 그리고 정책의 비효율성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뉴스보도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언론이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2절 신뢰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신뢰의 개념 및 효과

낯선 사람들과 접촉해가면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강내원, 2012). Putnam(1993a)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신뢰, 사회적 연결망, 규범을 제시하면서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갈등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Fukuyama(1995)는 신뢰란 주관적인 믿음이며 상대방이 계속해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strom&Walker(2003)은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이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감 정도로 정의하였다. 박통희(1999)는 신뢰에 대해 "불완전한 감독, 통제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손실의 개연성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박상완(2017)은 신뢰를 "상대의 능력 및 의도에 대한 호의적 대응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신뢰란 상대방의 호의적 대응을 기대하고 현재의 '불완전한 상황'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신뢰는 현재의 불완전한 상황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신뢰의 역할은 감시비용 등의 사회적비용(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서 사회적 효율을 증가시킨다(Kankc&Keefer, 1997). Whiteley(2000)은 신뢰가 경제성장을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갈등과 같은 집단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사회과학에서도 신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개념에 대한 일치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뢰의 대상에 따라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여 왔다. 장용진(2013)은 신뢰를 크게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신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낯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개인적 친밀감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신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즉,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영라 · 이숙종, 2018). 이러한 사회 신뢰는 개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Putnam, 1993),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김남옥 외, 2016).

장용진(2013)은 또 정부신뢰는 과거와 미래의 정부에 대한 믿음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손호중 · 채원호(2005)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취하는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지지”라고 정의하였으며, 오경민 · 박홍식(2002)은 정부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태도와 더불어 정부의 성과달성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대한 기대를 정부신뢰라고 정의하였다.

박희봉 외(2012)는 신뢰를 크게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하고, 대인신뢰를 세부적으로 사적신뢰와 일반신뢰, 제도신뢰를 국가기관신뢰와 사회기관신뢰로 구분하였다. 그는 특히 대인신뢰를 사적신뢰와 일반신뢰로 구분하면서, 현대와 같이 대규모의 이질적인 집단이 함께 어우러져있는 사회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특수하고 두터운 유형의 신뢰만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에 대한 중요성이 현대사회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위의 신뢰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사회신뢰는 일반신뢰와 동일한 개념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정부신뢰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신뢰(일반신뢰)는 대체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을 감수해냄으로써 긍정적인 감정과 협력,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신뢰는 불완전성,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래적 관점에서 정부의 호의적 대응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신뢰는 정부신뢰보다 좀 더 참여적인 성격이 강한 신뢰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유형의 신뢰 중에서도 사회신뢰(일반신뢰)와 정부신뢰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1) 사회갈등과 신뢰

고대유(2022)는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기회 · 조건의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사회갈등은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회 · 조건의 공정성은 사회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회 ·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임을 주장하였다. 임동진 · 박관태(2017)은 공정성과 사회갈등 사이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기관신뢰의 경우 공정성이 사회갈등에 미치는 부(−)의 영향 속에서 매개효과를 보임으로써 사회갈등 수준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효과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적 차이에 따라, 신뢰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강민성(2015)은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기존의 신뢰연구와는 다르게 사회신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정부신뢰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사회신뢰는 장기 기증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고 정부신뢰만이 장기 기증 의사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이수인, 2018). 마지막으로 이두희(2021)는 사회이동가능성에 대인신뢰와 공적신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대인신뢰는 사회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적신뢰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있어야지만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두 유형이 동일한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19개 OECD 회원국가와 18개 주요 비회원국가 대상으로 신뢰 유형별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일반신뢰와 정부신뢰 모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을 보여주었다(박희봉 외, 2012)[4]. 또한 권준이·은재호(2021)은 신뢰와 정치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높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낮은 외적 정치효능감과의 차이가 정치참여의 위기를 불러오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고 분석했다. 또한 높은 정부신뢰와 일반신뢰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져옴을 보여줌으로서 정부신뢰와 일반신뢰 모두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문화 환경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재형·남태우, 2021)에서도 신뢰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모두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두 신뢰유형은 그 효과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두 신뢰유형의 개념차이에 기반한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두 신뢰 유형이 차별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각각의 신뢰유형에 대해 비교적 확립된 개념적 정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두 유형의 신뢰가 종속변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를 불특정 다수 및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신뢰를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변수에 미치

4) 반면에 사적신뢰(가족.이웃에 대한 신뢰)는 국가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부패를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는 영향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2-1]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효과 실증연구

학 자	독립변수	개념	종속변수	연구결과
강민성 (2015)	사회신뢰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행복	부(−)의 영향
	정부신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정(+)의 영향
이수인 (2018)	일반신뢰	자신이 잘 모르는 타자에게로 확대된 신뢰	장기기증의사	유의미한 영향 없음
	정부신뢰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의 영향
이두희 (2021)	대인신뢰	타 시민들에 대한 평가나 태도	사회이동가능성	정(+)의 영향
	공적신뢰	정부기관이 대중의 규범적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정(+)의 영향 (단, 기관신뢰 일정수준 이상)
박희봉 외 (2012)	일반신뢰	사람들간의 관계농도가 옅은 신뢰로서 일반인 및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국가경쟁력	정(+)의 영향
	국가기관신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정(+)의 영향
김재형 외 (2021)	일반신뢰	구체적 정보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	행복	정(+)의 영향
	공적신뢰	정치적 기구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정(+)의 영향
권준이 외 (2021)	일반신뢰	불특정 다수,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	삶의 만족도	정(+)의 영향
	정부신뢰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		정(+)의 영향
Bjørnskov (2008)	사회적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명제에 일반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동의하는 정도	행복	정(+)의 영향
Tokuda et al. (2010)	사회신뢰	일반신뢰, 대인신뢰, 상호도움과 관련된 3가지 항목의 요인점수로 구성된 복합지수	행복	정(+)의 영향

제3절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주저 「니코마소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에서 행복이란 인간의 궁극적인 선이자 최고선, 목적이라고 제시했다(김남두 外, 2004). '궁극(窮極)'의 의미가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 임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 행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Layard(2005)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정의하며 행복은 인간의 삶을 설명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이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며, 삶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개념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며 정의 또한 용의하지 않다. 때문에 행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다. 첫째는 행복에 대한 개념정의 연구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다. Campbell(1976)은 행복이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행복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김명소 외, 2003). 행복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우 보통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이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훈구, 1997). 때문에 현재 많은 사회과학에서 행복의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객관적 지표를 주로 강조하며, 주로 개인의 외부환경인 일자리, 근로환경, 교육수준, 소득, 복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소득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무한정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많은 학자들은 객관적 삶의 질이 행복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후 행복의 주관적인 측면 강조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Diener(1985)는 이를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ing)'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행복이란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서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 만족감·기쁨(contentment)', 쾌락감(hedonic level)으로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Veenhoven, 1991). 위의 객관적·주관적 개념정의를 종합해보면 행복이란 객관적 삶의 지표에 대한 만족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2. 행복이론: 상향확산이론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연구방향 중 두 번째는 행복의 기원에 대한 연구이다. 한 쪽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며,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하향확산이론과 상향확산이론이다.

하향확산이론은 개인의 유전적 기질과 특성, 성격이 개인의 행복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개인의 유전적 기질이 낙관적이고 외향적이며 긍정적일수록 개인은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유민상, 2016). 이는 유전적으로 긍정적인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은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받더라도 덜 긍정적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덜 부정적인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하향확산이론에서는 개인의 인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전적·기질적 특성이 행복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상향확산이론은 소득·결혼·종교·여가 등의 활동들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만족과 궁극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Sirgy et al, 2001). 상향확산은 Andrews and withey(1976)과 Campbell et al.(1976)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가정과 여가생활, 직업 등에 대한 하위계층수준의 만족이 충족되어 궁극적으로는 상위계층의 행복에 이른다는 수직적 계층의 모습을 띈다고 설명한다(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이는 하향확산이론과는 다르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긍정적인 경험이 덜한 사람보다 궁극적으로 행복의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상향확산이론에 따른다면 개인의 삶의 만족, 행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행복에 대한 하향이론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유전적 기질·특성의 행복에 대한 결정론적 이론은 국민의 행복수준을 올리기 위한 연구에서 적합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향이론에 따르면 국민의 행복수준은 이미 개인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성질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수준은 어떠한 외부적 영향에도 변함없이 불행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개인의 유전적·기질적 차원의 문제이며, 정부가 개입할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버린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상향확산이론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개인의 기질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상향확산이론에 따라 개인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상향확산이론적 관점으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행복의 상향확산이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행복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고심해왔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행복의 결정요인으로는 주로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해볼 수 있으며, 객관적 요인은 인구통계학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주관적 요인은 심리적 요인과 신뢰, 사회갈등인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복의 객관적 요인

(1) 인구통계학적 요인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성별, 연령, 소득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대해 해외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Whit, 1992; Hellevik, 2003). 하지만 Diener 등(1999)의 연구와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성염색체에 따라 결정되는 요인으로 행복의 상향·하향이론에 따른다면 하향이론에 더 적합한 변수로 보인다. 실제로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Cameron, 1995),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더욱 풍부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가문의 존속을 위한 남아선호사상의 문화가 존재해왔으며, 고정적인 남녀역할의 문제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성별은 성염색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문화를 받아들이는 남녀집단의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성별을 행복의 상향이론에 따른 결정요인으로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김상곤 외, 2008)와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연구(Campbell, 1976)가 있다. 또한 연령과 행복의 관계가 U자형 형태를 띈다는 연구(주재선, 2007)와 ∩자형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Hellevik, 2003). 이처럼 연령과 행복과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소득의 경우에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지배적이다. Easterlin(1974)이 행복은 소득에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함에 따라 많은 후속연구가 촉진되었던 것처럼, 소득이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했던 당대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소득이 일정수준까지는 다른 변수들보다 행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나, 일정 시점 이상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2) 환경적 요인

임근식(2012)는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거환경, 지역에 대한 애착심, 교통환경, 안전환경, 사회적 여건, 교육환경, 쾌적한 환경, 기초생활여건 등의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물질적인 요인으로서 주거환경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비물질적인 요소로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다음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질적인 요인과 비물질적인 요인 둘 다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준홍·홍성효(2014)는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주거시설과 같은 인프라적 요소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이웃에 대한 신뢰, 환경오염, 문화예술 · 의료시설 접근성이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영균·김동규(2007)은 성남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주민 간 만족도의 차이 비교를 통해 건강한 생활여건, 문화여건, 자연환경, 교통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2) 행복의 주관적 요인: 심리적 요인

행복은 삶의 질로서 객관적인 요인의 충족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만족 영역으로서 개인이 특정한 삶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진다. 특히 개인의 ‘만족’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이며, ‘이스털린의 역설’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 속에서도 이러한 상대성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있어 이러한 주관적 요인은 객관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성의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바로 계층이다. 주관적인 계층의식은 현재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수준과는 상관이 없으며, 주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서 형성되는 인식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수준에 비해 스스로의 소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행복감이 낮다고 주장하는 연구(한준 외, 2014)가 존재하며,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아존중감(self-easteem)을 보이고

결국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Argyle, 2003).

우리 사회는 주6일에서 주5일로, 그리고 현재 주4일 도입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소위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현재 풍토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워라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가생활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행복 결정요인은 여가생활만족, 주관적 건강인식, 여가인식, 지출부담, 성별 순으로 나타난 김보람·김매이(2021)의 연구 결과처럼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은 행복의 주요한 심리적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이타심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도종환(2011)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높게 느끼며, 특히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강제로 참여한 청소년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발생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극심했으며 코로나가 점차 확산되어감에 따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증상·치사율 및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극심하였다. 이래혁(2021)는 충남 아산시 지역에서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분석 결과 응답자의 51.5%가 코로나19 스트레스 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민정·김윤정(2021)은 코로나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해보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코로나 불안감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주요변수 간 선행연구

1. 사회갈등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정해식 외(2014)는 사회갈등인식과 생활만족 간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회갈등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행복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또한 우명숙 외(2013)는 한국, 독일 등 5개국의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경제적 양극화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했다. 장승진(2011)은 한국사회의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빈부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생활만족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으며, Graham , C. & Felton, A.(2006)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불평등과 행복 간 관계의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진혜경(2016)은 청소년의 생활만족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사회갈등인식과 생활만족 간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갈등 중 특히 소득불평등과 이에 대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갈등이란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쟁과 충돌로 대표되는데, 이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정반대의 방향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결국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Graham & Felton, 2006)가 있는 반면,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의 국민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Haller & Hadler, 2006).

마지막으로 소득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양호 외, 2013)에서는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행복감이란 개인의 감정적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사회갈등(경제적 불평등)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은 현실에서 본인들이 직접 겪고 느끼는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대부분 방송통신매체 등을 통한 간접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러한 사회갈등이 본인과는 동떨어져있는 사회현상으로 치부해버려 본인의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행복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확인해볼 것이며, 갈등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2-2] 사회갈등인식과 행복감에 관한 실증연구

학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결과
정해식 외 (2014)	사회갈등인식	삶의 만족도	유의미한 부(-)의 관계
우명숙 외 (2013)	경제적·양극화 인식	삶의 만족	
장승진 (2011)	소득격차·빈부갈등 인식	삶의 만족도	
Graham, C. & Felton, A.(2006)	경제적 불평등	생활 만족	
진혜경 (2016)	사회갈등인식	생활 만족	
이양호 외 (2013)	기회불평등	행복	
	소득불평등		유의미한 관계 없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갈등인식수준	행복도 삶의 만족도	사회갈등인식수준↑ → 행복/삶의만족도↓ (분산분석)

2. 조절효과로서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

신뢰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Helliwell(2003, 2006)은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12개국의 행복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지은 외(2014)는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통제변수로서 개인적 특성요인 중 심리적 요인인 낙관주의 주관적 계층인식, 신뢰, 이념성향, 기부가 행복감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강민성(2015)은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사회신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정부신뢰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가 두 변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Dirks & Ferrin(2001)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뢰가 어떤 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분석하려 하지만, 신뢰가 사람들의 인식적인 관계의 측면에서는 조절변수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절변수로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지원 외(2021)는 Veenhoven가 제시한 '투입-전환-산출'이라는 개념틀을 통해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투입이 아닌 간접적이고 조절적인 전환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는 가치갈등과 국가 경제전망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조절변수로

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지, 2022). 또한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다. 이영라 · 이숙종(2018)은 사회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며 정부신뢰와 사회신뢰 모두 이익 · 가치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조절효과를 보이지만, 이념갈등에 대해서만 정부신뢰는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신뢰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대조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줬다. 오미옥(2020)은 사회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참여, 네트워크, 신뢰 중에서 참여와 신뢰 변수만이 사회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민혜 · 이승종(2019)은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시민 참여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부신뢰는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행정적 참여수단인 시민관여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부신뢰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이 변경되어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이후에는 코로나 관련하여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해규 · 김자림(2021)은 코로나19 불안이 루머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조절변수로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루머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루머에 대한 신뢰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창연 · 이충기(2020)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직업불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업불안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에서 정부신뢰는 이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제시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절효과는 아니나 매개효과로서 일반신뢰(사회신뢰)와 공적신뢰(정부신뢰)를 분석한 연구(김재형·남태우, 2021)가 있었다. 서울시민의 문화 환경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일반신뢰와 공적신뢰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연구였으며, 연구 결과 문화 환경 만족도는 행복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모두 문화 환경 만족도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처럼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로서 진행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구성원의 행복감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활용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신뢰까지 포함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또한 그러한 상황이다. 현대인의 생활반경이 지역에서 국가 및 세계로 넓어지고, SNS 발달로 서로 대면하지 않고 타인과 대규모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웃보다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신뢰에 대한 연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대체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갈등과 국가의 역할은 분리할 수 없으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정부는 매일 실시간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특히 국내 코로나 유증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국민들은 정부역할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감을 인터넷 곳곳에 표출하기도 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와 같은 시기적 상황을 활용하여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조절변수로서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2-3] 신뢰의 조절효과 실증연구

학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조절변수 증가에 따른 변화
오민지 (2022)	가치갈등 인식	국가경제 전망	정부신뢰	부(-) 영향 완화
이영라·이숙종 (2018)	사회갈등	주장형 정치참여	사회신뢰	-(이익·가치갈등) 정(+)의 영향 강화 -(이념갈등) 정(+)의 영향 강화
			정부신뢰	-(이익·가치갈등) 정(+)의 영향 강화 -(이념갈등) 정(+)의 영향 약화
오미옥 (2020)	사회갈등	협력적 거버넌스	신뢰	부(-)의 영향 완화
김민혜·이승종 (2019)	시민관여	삶의 질	정부신뢰	정부신뢰수준의 고저에 따른 방향성 변화
이해규·김자림 (2021)	코로나19 불안	루머신뢰	정부신뢰	정(+)의 영향 완화
박창연·이충기 (2020)	스트레스·직업불안	삶의 만족	정부신뢰	부(-)의 영향 감소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각 신뢰유형의 조절효과를 보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갈등의 관리수준까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갈등은 앞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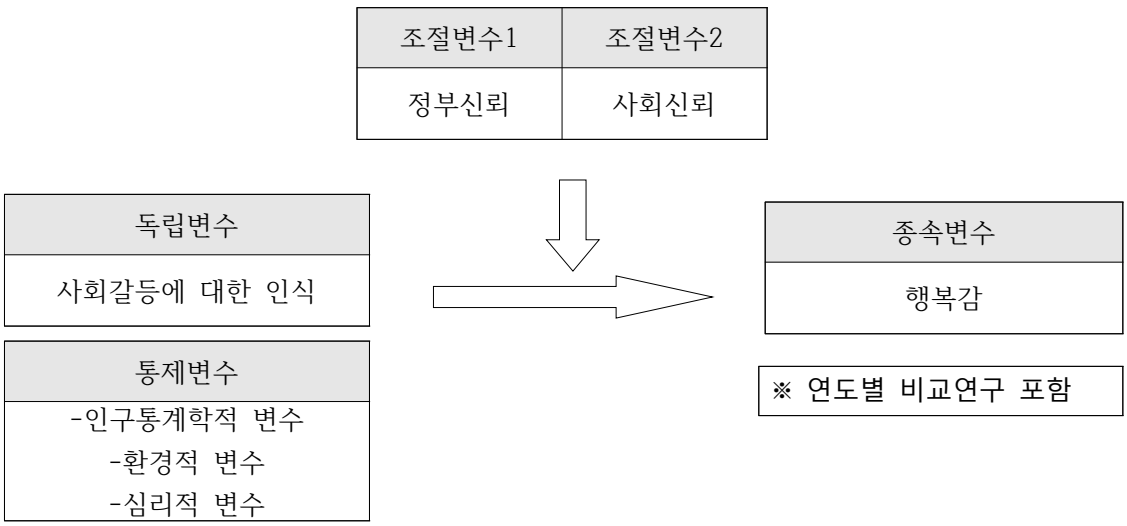
한 바와 같이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갈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에서 벗어나 상호작용론적 견해에 따라 사회갈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나가야 한다. 사회갈등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사회갈등이 적절한 수준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면, 사회구성원의 행복수준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론 결국엔 사회갈등과 행복 사이의 조절효과를 일으키는 변수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다. 본 연구는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갈등 관리에 중요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표 2-3]을 보면 정부신뢰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사회신뢰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는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를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갈등관리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신뢰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종속변수는 행복감, 독립변수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며, 조절변수는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이다. 통제변수로는 크게 인구통계학적변수와 환경적변수, 심리적변수로 크게 분류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2절 연구가설

사회갈등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전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어 감에도 국민의 행복감이 증가하는 연구결과도 있었으나, 갈등과 행복의 기본적 개념이 반대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대체적으로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가설 1>과 같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신뢰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강민성(2015)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신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정부신뢰는 정(+)의 영향을 보이는 등의 차별적인 효과를 보인다, 또한 이영라 · 이숙종(2018)의 연구결과에서는 이념갈등에 대해서 정부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신뢰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차별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신뢰는 협력을 촉진시킨다는 Putnam(1993)의 정의와 사회신뢰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김남옥 외(2016)의 정의에 따를 때 사회신뢰는 집단간의 결집을 더욱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참여와 이에 따른 사회갈등의 수준이 증폭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신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여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차별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신뢰의 증가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 오히려 갈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사회적 논의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사회갈등이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종속변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두 유형의 신뢰유형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신뢰유형 모두 행복감에 동일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가설 2−1> 정부신뢰는 행복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연장선으로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갈등은 국가주도 경제발전 및 정책 등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갈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회구성원간의 기대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몇몇 젠더갈등이나 세대갈등, 종교갈등 등은 개인 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갈등 유형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갈등에서는 사회신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사회갈등 인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며, 두 신뢰유형 모두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정과 함께, 일반신뢰(사회신뢰)와 공적신뢰(정부신뢰) 모두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매개효과를 보이는 선행연구(김재형·남태우, 202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의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가설 3-1> 정부신뢰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과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 3-2>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과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제3절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202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03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조사로 "도시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의 삶의 질 및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서울시의 현 상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서울서베이,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가구조사(가구조사 · 가구원조사)와 시민조사, 외국인조사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는 이 중 가구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시 2만가구(만15세 이상 가구원 40,441명)를 가구방문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환경과 주거와 생활, 안전, 교통, 문화와 여가, 건강, 사회참여, 노후생활, 사회통합의 분야 및 응답자 특성에 대한 기본 문항을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략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 조사를 기준으로 가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9%p, 가구원은 95% 신뢰수준에서 ±0.49%p를 보였다(서울서베이, 2021).

5) 추가적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2020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연도별 비교를 진행하였다.

2. 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

1) 종속변수: 행복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감은 「서울서베이」의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원용”에서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영역은 ① 자신의 건강상태, ② 자신의 재정상태, ③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④ 가정생활, ⑤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에 대한 행복감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해 자신의 행복점수를 0점(가장 불행한 상태)부터 10점(가장 행복한 상태)까지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값을 측정한다. 본 연구는 각 영역별 행복점수에 대한 측정치의 합을 종속변수인 행복으로 조작화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행복에 대한 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50점까지 나타나게 된다.

2) 독립변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가구원용 조사표 문항에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은 1) 자연재해, 2) 감염병, 3) 안전사고, 4) 폭력범죄, 5)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유출 문제, 6) 인터넷상의 괴롭힘, 7) 경제위기, 8) 실업, 9) 사회갈등(빈부격차, 불평등, 세대갈등 등), 10) 부정부패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값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항목 중 9) 사회갈등(빈부격차, 불평등, 세대갈등 등)의 항목의 측정값만을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으로 조작화하였다.

3) 조절변수: 정부신뢰, 사회신뢰

조절변수로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가구원용 조사표 중 “귀하는 다음 각 사람 또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은 1) 가족, 2) 친구, 3) 이웃,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5) 국내 거주 외국인, 6) 공공 기관(서울시, 구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① 전혀 신뢰 안 함, ② 별로 신뢰 안 함, ③ 보통, ④ 약간 신뢰, ⑤ 매우 신뢰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값을 측정하였다. 이 중 조절변수로서 정부신뢰는 6) 공공기관(서울시, 구청 등)에 대한

측정치로 조작화하였으며, 사회신뢰는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측정치로 조작화하였다.

4) 통제변수

(1)인구통계학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력, 소득, 근무형태, 주택형태, 주거점유형태, 혼인상태, 종교로 설정하였다. 문항은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의 표지에 작성된 문항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원용"의 응답자 특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0)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으며, 나이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① 중학교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하, ④ 대학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소득은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근무형태는 무직을 기준변수(=0)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주택형태는 다세대주택·연립빌라·기타를 기준변수(=0)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주거점유형태는 월세·사글세·무상을 기준변수(=0)로, 전세와 자가집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을 기준변수(=0)로, 기혼과 기타(별거 · 사별 · 동거)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종교는 무교를 기준변수(=0)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2) 환경적 변수

환경적변수로는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녹지환경, 거주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에 대한 측정은 "귀하는 다음의 생활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동일한 문항 안에 각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경제환경은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회환경은 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을 측정하였으며, 교육환경은 교육비, 교육여건 등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통환경은 버스(시내, 마을, 광역버스)·지하철·택시 각 항목에 대해서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⑨ 이용하지 않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⑨

이용하지 않음으로 표기된 경우, 이를 각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보고 5점 척도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녹지환경은 “귀하는 귀하가 사는 곳 근처(1km 이내, 걸어서 15분 거리)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닉까?” 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를 사용·측정하였다. 문화환경은 “귀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를 사용·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서울시를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구분하였으며, 동남권을 기준변수(=0)로, 나머지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3) 심리적 변수

심리적변수로는 계층이동가능성, 여가생활인식, 자원봉사, 기부로 설정하였다. 계층이동가능성은 가구원용 조사표 중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나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의 5점 척도를 사용·측정하였다. 여가생활인식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로서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으로 측정하였으며, 자원봉사와 기부는 비경험을 기준변수(=0)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표 3-1] 변수의 측정

변수		문항	측정
종속변수	행복감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 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자신의 건강상태, ② 자신의 재정상태, ③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④ 가정생활, ⑤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0점(가장 불행한 상태) ~ 10점(가장 행복한 상태)
독립변수	사회갈등 인식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사회갈등(빈부격차, 불평등, 세대갈등 등)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⑤ 매우 심각하다

조절변수		신뢰	"귀하는 다음 각 사람 또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회신뢰: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정부신뢰: 6) 공공 기관(서울시, 구청 등)	① 전혀 신뢰 안 함 ~ ⑤ 매우 신뢰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여성(=0), 남성(=1)
		나이	응답자의 나이	① 10대 ~ ⑥ 60대 이상
		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	① 중학교 이하 ~ ④ 대학원 이상
		소득	응답자의 소득	① 2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 이상
		근무형태	무직, 비정규직, 정규직	해당(=1), 비해당(=0)
		주택형태	다세대주택·연립빌라·기타, 단독주택, 아파트	해당(=1), 비해당(=0)
		주거점유형태	월세·사글세·무상, 전세, 자가집	해당(=1), 비해당(=0)
		혼인상태	미혼, 기혼, 기타(별거 · 사별 · 동거)	해당(=1), 비해당(=0)
		종교	무교, 유교	유교(=1), 무교(=0)
	환경적변수	주거·경제·사회·교육 환경	"귀하는 다음의 생활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주거환경: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경제환경: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의 만족도 -사회환경: 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교육환경: 교육비, 교육 여건 등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교통환경	버스(시내, 마을, 광역버스)·지하철·택시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녹지환경	귀하는 귀하가 사는 곳 근처(1km 이내, 걸어서 15분 거리)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문화환경	"귀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거주지역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해당(=1), 비해당(=0)
	심리적변수	계층이동 가능성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나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 ⑤ 매우 높다
		여가생활 인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자원봉사	경험, 비경험	비경험(=0), 경험(=1)
		기부	경험, 비경험	비경험(=0), 경험(=1)

3. 분석방법

각 변수들의 영향정도에 대해 202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기준으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분산분석을 진행하고,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연도별로 결과가 동일한지 비교하였다.

분석은 R 4.2.1을 사용하였다.

제 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02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00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 40,44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음 [표 4-1]은 표본으로 추출된 40,441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1] 2021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21,400	52.9	근무형태	무직	7,801	19.3
	남성	19,041	47.1		정규직	15,464	38.2
나이	10대	1,570	3.9		비정규직/기타	17,176	42.5
	20대	4,243	10.5	학력	중학교 이하	2,689	6.6
	30대	8,734	21.6		고등학교	10,600	26.2
	40대	9,189	22.7		대학교	24,971	61.8
	50대	7,606	18.8		대학원이상	2,181	5.4
	60대 이상	9,099	22.5	혼인상태	미혼	12,211	30.2
소득	200만원 미만	3,102	7.7		기혼	24,840	61.4
	200~300	4,473	11.0		기타	3,390	8.4
	300~400	5,739	14.2	종교	무교	22,761	56.3
	400~500	6,184	15.3		유교	17,680	43.7
	500만원 이상	20,943	51.8	주택형태	다세대/연립/기타	12,402	30.6
거주지역	도심권	3,306	8.2		단독주택	9,288	23.0
	동북권	12,964	32.0		아파트	18,751	46.4
	서북권	4,868	12.0	주거점유형태	월세/사글세/무상	4,247,	10.5
	서남권	11,919	29.5		자가	24,242	60.0
	동남권	7,384	18.3		전세	11,952	29.5
자원봉사	비경험	37,600	93.0	기부	비경험	34,590	85.6
	경험	2,841	7.0		경험	5,851	14.4

성별은 여성이 21,400명으로 5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19,041명으로 47,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570명(3,9%), 20대 4,243명(10,5%), 30대 8,734명(21,6%), 40대 9,189명(22.7%), 50대 7,606명(18.8%), 60대 이상이 9,099명(22.5%)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102명(7.7%), 200~300만원 4,473명(11.0%), 300~400만원 5,739명(14.2%), 400~500만원 6,184명(15.3%), 500만원 이상이 20,943명(51.8%)로

나타나 서울시 거주자의 50% 이상이 월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동북권 32.0%, 서남권 29.5%, 동남권 18.3%, 서북권 12.0%, 도심권 8.2%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를 보면 비정규직/기타가 17,176명(4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규직 15,464명(38.2%), 무직 7,801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 이하 6.6%, 고등학교 26.2%, 대학교 61.8%, 대학원이상 5.4%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이 61.4%, 미혼 30.2%, 기타 8.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유 무교가 56.3%, 유교가 43.7%를 차지했으며, 주택형태의 경우 아파트 46.4%, 다세대/연립/기타 30.6%, 단독주택 23.0%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여 서울시 주민들은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자가가 60.0%, 전세 29.5%, 월세/사글세/무상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자원봉사와 기부의 경험유무의 경우 비경험이 각각 93.0%와 85.6%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와 기부의 참여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및 신뢰도 분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하는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4-2]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감의 경우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각 10점을 합산한 점수로서, 50점 만점에 평균 32.14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감이 6.77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재정상태에 대한 행복감이 5.94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 경제적 부분에서의 행복감이 건강 · 대인 · 가정 · 사회에서의 행복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서울시민들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 ± 0.89 점으로 사회갈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경우 각각 2.01 ± 0.99점과 3.13 ± 1.07점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은 처음 만난 낯선 사람보다 공공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뢰수준이 보통의 수준을 보였으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수준을 보였다.

환경적 변수로서 주거환경은 평균 3.60, 경제환경 3.31, 사회환경 3.45, 교육환경 3.32, 녹지환경 3.39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

다. 교통환경의 경우 버스·지하철·택시 각각 5점 만점으로, 15점 만점에 11.19점 을 보이고 있어 교통환경 또한 보통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보이고 있었다. 문화환경의 경우 문화시설·문화프로그램·문화비용 각각 5점 만점으로, 15점 만점에 9.81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비용에 대한 평균이 시설·프로그램보다는 낮은 수준의 평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 2021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행복감		40,411	32.14	8.25	0	50
		건강상태		6.77	2.09	0	10
		재정상태		5.94	2.03	0	10
		대인관계		6.50	1.80	0	10
		가정생활		6.60	1.77	0	10
		사회생활		6.33	1.87	0	10
독립변수	사회갈등인식		40,411	3.90	0.89	1	5
조절변수	사회신뢰		40,411	2.01	0.99	1	5
	정부신뢰		40,411	3.13	1.07	1	5
환경요인	주거환경		40,411	3.60	0.82	1	5
	경제환경		40,411	3.31	0.90	1	5
	사회환경		40,411	3.45	0.83	1	5
	교육환경		40,411	3.32	0.82	1	5
	교통환경		40,411	11.19	2.01	3	15
		버스		3.88	0.84	1	5
		지하철		3.93	0.90	1	5
		택시		3.39	0.88	1	5
	녹지환경		40,411	3.39	0.93	1	5
	문화환경		40,411	9.81	2.07	3	15
		문화시설		3.44	0.82	1	5
		프로그램		3.31	0.82	1	5
		비용		3.06	0.81	1	5
심리적요인	계층이동가능성		40,411	2.81	0.84	1	5
	여가생활인식		40,411	3.17	0.83	1	5

마지막으로 심리적변수로서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식은 5점 만점에 2.81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층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3.17로 보통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대체적인 심리적 성향은 여유롭지 못하고 미래의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행복감 · 교통환경 · 문화환경은 3개 이상의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변수값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이 각각 행복감 · 교통환경 · 문화환경을 얼마나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검정을 진행하였으며, [표 4-3]와 같이 각 변수 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표 4-3] 2021년 주요변수의 신뢰도분석

변수		측정문항	Cronbach's α
종속변수	행복감	자신의 건강상태(행복)	.913
		자신의 재정상태(행복)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행복)	
		가정생활(행복)	
		사회생활(행복)	
통제변수	교통환경	버스 만족도	.654
		지하철 만족도	
		택시 만족도	
	문화환경	문화시설 만족도	.801
		문화프로그램 만족도	
		문화비용 만족도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행복감의 경우에는 건강 · 재정 · 관계 · 가정 · 사회생활 각각의 행복에 대한 측정문항 신뢰도는 0.913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문화환경은 0.801로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의 경우 0.654로 나타나 행복감 · 문화환경처럼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나 측정문항들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의 값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절 주요변수의 서울 시민들의 집단간 수준

1. 서울시민들의 종속 · 독립변수에 대한 집단간 수준 비교

본 연구의 종속 · 독립변수인 행복감과 사회갈등인식에 대해 인구통계학적으로 구분한 집단간 수준을 분산분석을 통해 [표 4-4]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분산분석 결과, 행복감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더 높은 행복

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성별에 따른 행복의 연구(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서울시 종속·독립변수의 집단간 수준(분산분석)

변수	구분	빈도	행복감	사회갈등인식
성별	여성	21.400	32.01**	3.90
	남성	19.041	32.27**	3.89
연령	10대	1.570	33.94***	3.72***
	20대	4.243	33.12***	3.90***
	30대	8.734	31.88***	3.97***
	40대	9.189	31.57***	3.97***
	50대	7.606	32.55***	3.92***
	60대 이상	9.099	31.84***	3.77***
소득	200만원 미만	3,102	25.91***	3.89
	200~300	4,473	29.79***	3.95
	300~400	5,739	31.58***	3.87
	400~500	6,184	32.63***	3.91
	500만원 이상	20,943	33.56***	3.89
거주지역	도심권	3,306	32.18	3.93***
	동북권	12,964	32.25	3.92***
	서북권	4,868	32.21	3.89***
	서남권	11,919	31.66	3.88***
	동남권	7,384	32.61	3.88***
근무형태	무직	7.801	31.64***	3.83***
	정규직	15.464	33.19***	3.94***
	비정규직/기타	17.176	31.41***	3.89***
학력	중학교 이하	2.689	29.15***	3.71***
	고등학교	10.600	32.57***	3.78***
	대학교	24.971	32.41***	3.94***
	대학원이상	2.181	30.54***	4.15***
혼인상태	미혼	12.211	30.88***	3.96***
	기혼	24.840	33.01***	3.88***
	기타	3.390	30.27***	3.78***
종교	무교	22.761	31.76***	3.91*
	유교	17.680	32.63***	3.89*
주택형태	다세대/연립/기타	12.402	31.64***	3.93**
	단독주택	9.288	31.64***	3.86**
	아파트	18.751	32.72***	3.89**
주거형태	월세/사글세/무상	4.247.	28.38***	4.07**
	자가	24.242	32.63***	3.85**
	전세	11.952	32.47***	3.93**

주: *p<0.1, **p<0.05, ***p<0.01

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10대가 가장 높은 행복감(33.94)을 보이고 있으며, 40대가 가장 낮은 행복감(31.57)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 행복감에 대한 평균치가 40대에 비해 다소 높아지지만 60대에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행복감은 대체적으로 김상곤 외(200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200만원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감에 대한 평균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Easterlin의 소득의 역설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500만원 이상에 빈도수가 밀집되어 있어, 500만원 이상에 대한 집단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Easterlin의 소득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00만원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이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며(33.19), 오히려 비정규직/기타보다 무직이 행복감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및 처우가 매우 심각함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높아지다가 대학원까지 행복감이 낮아지는 ∩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학력이 높아진다고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인상태와 종교의 경우에는 기혼집단과 유교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행복감에 대한 평균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거형태와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 공화국답게 아파트에 사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행복감을 보였으며, 자가인 집단이 전세나 월세 집단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행복감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동남권(32.61)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여 소득에 따른 행복감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서남권(31.66)이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여 거주지역에 따른 소득수준을 확인해야만 거주지역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인식에 대해서 집단간 수준을 분석해본 결과 성별과 소득을 제외하고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10대(3.72)와 60대 이상(3.77)이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낮고, 30대와 40대(3.97)이 가장 높은 ∩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어 사회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집단일수록 사회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 행복감의 경우 30대와 40대가 가장 낮고 10대, 2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어 표면적으로 행복감과 사회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반대의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도심권(3.93)이 가장 평균치가 높고 다음으로 동북권(3.92), 서북권(3.89), 서남권·동남권(3.8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갈등과 관련된 집회가 주로 도심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근무형태별로는 정규직(3.94)이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3.89), 무직(3.83)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행복감 수준이 가장 낮아 사회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할 것이라 생각했으

나, 행복감과는 반대로 정규직보다 사회갈등에 대해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3.71), 고등학교(3.78), 대학교(3.94), 대학원이상(4.15)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행복감은 낮아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미혼(3.96)이 기혼(3.88) 및 기타(3.78)보다 높은 사회갈등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종교의 경우 무교(3.91)집단이 유교(3.89)보다 높은 사회갈등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주택형태의 경우 다세대/연립/기타(3.93)이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단독주택(3.86)이 가장 낮았다. 주거형태의 경우 월세/사글세/무상(4.07), 전세(3.93), 자가(3.85)순으로 나타나 집단간 행복감 순위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서울시민들의 조절변수에 대한 집단간 수준 비교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대해 인구통계학적으로 구분한 집단간 수준을 분산분석을 통해 [표 4-5]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사회신뢰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부신뢰의 경우에는 성별과 소득을 제외하고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회신뢰의 경우 남성(2.03)이 여성(1.99)보다 사회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사회신뢰의 경우 30대(1.94), 20대(1.97), 10대(2.00), 40대(1.95), 50대(2.03), 60대 이상(2.13) 순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정부신뢰의 경우 30대(2.98), 10대(3.00), 40대(3.03), 20대(3.04), 50대(3.17), 60대 이상(3.38) 순으로 나타나 20대를 제외하고는 사회신뢰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의 경우 400~500만원(2.07)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 및 200~300만원(1.93)이 가장 낮은 사회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역의 경우 동남권(3.15), 서남권(3.14), 동북권(3.13), 도심권(3.08), 서북권(3.06)순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의 경우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모두 무직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 평균치를 보여주었으나, 사회신뢰의 경우 정규직(2.01)이 비정규직(2.00)보다 높았으며, 정부신뢰의 경우 반대로 비정규직(3.13)이 정규직(3.07)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사회신뢰는 고등학교(2.14), 중학교(2.10), 대학교(1.97), 대학원이상(1.71)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았으며, 정부신뢰는 중학교(3.35), 고등학교(3.31), 고등학교(3.06), 대학원이상(2.67)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낮

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의 경우 모두 유교집단이 무교집단보다 신뢰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혼인상태의 경우 미혼보다 기혼이 신뢰수준이 높았으나, 정부신뢰에 있어서는 기혼보다 기타(이혼/사별/기타)(3.32)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4-5] 서울시 조절변수의 집단간 수준(분산분석)

변수	구분	빈도	사회신뢰	정부신뢰
성별	여성	21.400	1.99***	3.13
	남성	19.041	2.03***	3.11
연령	10대	1.570	2.00***	3.00***
	20대	4.243	1.97***	3.04***
	30대	8.734	1.94***	2.98***
	40대	9.189	1.95***	3.03***
	50대	7.606	2.03***	3.17***
	60대 이상	9.099	2.13***	3.38***
소득	200만원 미만	3,102	1.93***	3.13
	200~300	4,473	1.93***	3.09
	300~400	5,739	2.03***	3.14
	400~500	6,184	2.07***	3.13
	500만원 이상	20,943	2.01***	3.12
거주지역	도심권	3,306	2.00	3.08***
	동북권	12,964	2.02	3.13***
	서북권	4,868	2.01	3.06***
	서남권	11,919	2.01	3.14***
	동남권	7,384	2.00	3.15***
근무형태	무직	7.801	2.03**	3.20***
	정규직	15.464	2.01**	3.07***
	비정규직/기타	17.176	2.00**	3.13***
학력	중학교 이하	2.689	2.10***	3.35***
	고등학교	10.600	2.14***	3.31***
	대학교	24.971	1.97***	3.06***
	대학원이상	2.181	1.71***	2.67***
혼인상태	미혼	12.211	1.89***	2.96***
	기혼	24.840	2.06***	3.18***
	기타	3.390	2.06***	3.32***
종교	무교	22.761	1.99***	3.10***
	유교	17.680	2.03***	3.15***
주택형태	다세대/연립/기타	12.402	1.98**	3.14**
	단독주택	9.288	2.04**	3.12**
	아파트	18.751	2.01**	3.11**
주거형태	월세/사글세/무상	4.247.	1.85***	3.00***
	자가	24.242	2.04***	3.12***
	전세	11.952	2.01***	3.17***

주: *p<0.1, **p<0.05, ***p<0.01

주택형태에서는 사회신뢰의 경우 단독주택(2.04)이 신뢰수준이 가장 높고 다세대/연립/기타(1.98)이 가장 낮았으나, 정부신뢰의 경우 다세대/연립/기타(3.14)가 신

뢰수준이 가장 높고 아파트(3.11)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에서는 사회신뢰의 경우 자가(2.04), 전세(2.01), 월세/사글세/무상(1.85)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았으나, 정부신뢰의 경우 전세(3.17), 자가(3.12), 월세/사글세/무상(3.00)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아 월세/사글세/무상은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서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신뢰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

1.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종속변수인 행복감과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인식, 그리고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및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표 4-6]와 같이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행복감과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인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18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리고 종속변수인 행복감과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와는 0.29($p<0.001$), 정부신뢰와는 0.37($p<0.001$)로 둘 다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관분석에서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간의 차별적인 효과는 보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행복감과 다른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환경이 0.42($p<0.001$)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문화환경이 0.35($p<0.001$), 주거환경이 0.30($p<0.001$), 교육환경이 0.29($p<0.001$) 순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이들 변수 역시 값은 그리 크지 않아 회귀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2. 사회갈등인식과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인식에 대해 조절변수인 사회신뢰(−0.22, $p<0.001$)와 정부신뢰(−0.15, $p<0.05$)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각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의 방향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에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 값은 크지 않았으며 여기서도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간의 차별적인 효과는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환경(−0.10, $p<0.001$), 교육환경(−0.03, $p<0.001$), 기부(−0.04, $p<0.001$)도 마찬가지로 행복감과의 관계와는 반

대로 사회갈등인식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환경(0.01, p<0.001), 사회환경(0.02, p<0.001), 녹지환경(0.15, p<0.001) 교통환경(0.16, p<0.001), 문화환경(0.02, p<0.001), 여가만족(0.07, p<0.001), 자원봉사(0.01, p<0.05)의 경우 사회갈등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는 행복감과 사회갈등인식과 모두 동일하게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환경이나 교육환경과 달리 이들 변수가 사회갈등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변수가 경제환경이나 교육환경과는 달리 주변에 대한 관심적인 변수(경제·교육환경과는 달리 시야, 이동, 경험 등의 속성을 가진 변수)라는 점에서 볼 때,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이러한 변수가 높은 사람의 경우 사람간의 교류가 다른 서울시민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런 사람의 경우 사람간의 교류가 많은 사람들보다 갈등인식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느낀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3.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

우선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는 0.39(p<0.001)로 나타나 사회신뢰가 높은 사람은 정부신뢰도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신뢰유형별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희봉·이희창, 2009)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가 정부기관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사회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부신뢰가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후 진행할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간의 상관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다중공선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녹지환경의 경우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른 환경적 변수와 사회·정부신뢰와의 상관관계와는 다른 방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교통환경의 경우는 정부신뢰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사회신뢰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녹지환경과 교통환경 변수는 사회갈등인식과의 상관관계에서 다른 환경적 변수보다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차후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녹지환경과 교통환경변수가 사회갈등인식과 신뢰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조절변수나 매개변수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통환경의 경우에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각각 다른 방향의 상관관계를 띄고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의 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신뢰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0.01, $p<0.01$)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부의 경우 사회신뢰(0.06, $p<0.001$)뿐만 아니라 정부신뢰 또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0.17, $p<0.001$)을 보여주고 있다.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등 정부기관(국세청 등)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자원봉사는 철저하게 정부와는 연관됨이 없이 순수하게 사람간의 관계 혹은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변수임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연령과 학력의 경우에는 분산분석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신뢰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은 사람은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학력 간의 상관관계 또한 음의 상관관계(−0.31, $p<0.001$)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학력이 현재 젊은 세대보다 낮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학력이 직접적으로 신뢰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 보다는 연령이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차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4-6]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행복감	1																			
2. 사회갈등인식	-.18***	1																		
3. 사회신뢰	.29***	-.22***	1																	
4. 정부신뢰	.37***	-.15*	.39***	1																
5. 주거환경	.30***	.01***	.05***	.18***	1															
6. 경제환경	.42***	-.10***	.17***	.20***	.46***	1														
7. 사회환경	.27***	.02***	.07***	.18***	.48***	.41***	1													
7. 교육환경	.29***	-.03***	.12***	.21***	.44***	.42***	.50***	1												
9. 녹지환경	.00	.15***	-.11***	-.04***	.24***	.11***	.23***	.18***	1											
10. 교통환경	.15***	.16***	-.03***	.12***	.31***	.19***	.31***	.27***	.34***	1										
11. 문화환경	35***	.02***	.15***	.29***	.32***	.30***	.34***	.35***	.24***	.40***	1									
12. 여가만족	.25***	.07***	.03***	.08***	.22***	.21***	.23***	.22***	.27***	.29***	.33***	1								
13. 자원봉사	.02***	.01*	.01**	.01	.03***	.02***	.03***	.01*	.07***	.05***	.04***	.06***	1							
14. 기부	.18***	-.04***	.06***	.17***	.07***	.08***	.01	.04***	-.03***	.02***	.07***	.01	.19***	1						
15. 계층이동	.28***	-.06***	.13***	.09***	.14***	.20***	.15***	.16***	.13***	.13***	.20***	.23***	.09***	.03***	1					
16. 근무형태	-.03***	.01**	-.01*	-.01**	-.02***	-.04***	-.01	-.01*	-.01	-.01	-.02**	-.02***	-.01*	-.01	-.03***	1				
17. 연령	-.04***	-.04***	.06***	.12***	.04***	.02***	.01*	.03***	.01**	.01**	-.01**	-.05***	-.05***	.04***	-.16***	.05***	1			
18. 학력	.03***	.11***	-.09***	-.14***	-.00	.03***	.02***	.00	.07***	.03***	.06***	.08***	.04***	-.01	.15***	.00	-.31***	1		
19. 소득	.25***	-.01	.03***	.00	.11***	.22***	.09***	.09***	.04***	.02***	.10***	.06***	.05***	.05***	.17***	-.03***	-.15***	.28***	1	
20. 성별	-.02**	.01	-.02***	.01	-.00	-.01*	.01	.01	.01**	.02**	.01*	.00	.02***	.00	-.03***	-.03***	-.03***	-.10***	-.05***	1

주: ***p=0.001수준에서 유의(양측), **p=0.01수준에서 유의(양측), *p=0.05수준에서 유의(양측)

제4절 주요변수 간 위계적 회귀분석 및 연도별 비교

1. 주요변수 간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변수로서 사회갈등인식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살펴보고, 조절변수로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며, 그리고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4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변수와 환경적변수, 심리적변수만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인식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사회갈등인식과 사회신뢰·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4단계 상호작용 변수의 경우 평균중심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요약한 내용은 [표 4-7]와 같았다

[표 4-7]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요약

단계	R^2	Adj. R^2	추정값 표준오차	F값	R^2 변화량
1단계	0.3384	0.3379	6.713	738.1^{***}	
2단계	0.3541	0.3536	6.633	763.8^{***}	0.0157 ↑(증가)
3단계	0.3984	0.3980	6.401	863.3^{***}	0.0443 ↑(증가)
4단계	0.3994	0.3989	6.396	814.3^{***}	0.0010 ↑(증가)

주: $^{*}p<0.05$, $^{**}p<0.01$, $^{***}p<0.001$

통제변수만 투입된 1단계에서는 수정된 R^2 값이 0.338로 33.8%의 설명력을 보였고, 독립변수를 추가 투입한 2단계에서는 R^2 값이 0.354로 1단계보다 0.016만큼 증가하여 설명력은 35.4%로 증가하였다. 3단계는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것으로 R^2 값이 0.398로 2단계보다 0.044만큼 증가하여 설명력은 39.8%로 증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4단계에서는 R^2 값이 0.399로 3단계보다 0.001만큼 증가하여 설명력은 39.9%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수가 투입될 때마다 각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단계별 F값은 1단계 738.1($p<0.001$), 2단계 763.8($p<0.001$), 3단계 863.3($p<0.001$), 4단계 814.3($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행복감			Step 1			Step 2			Step 3			Step 4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독립변수	사회갈등 인식(A)					−0.130***	−31.322	1.090	−0.095***	−23.287	1.126	−0.096***	−23.632	1.128
조절변수	사회신뢰(B)								0.097***	22.329	1.269	0.099***	22.747	1.291
	정부신뢰(C)								0.181***	40.223	1.369	0.180***	40.000	1.371
상호작용	(A)*(B)											0.018***	4.426	1.226
	(A)*(C)											−0.033***	−8.018	1.207
인구통계학적변수	성별		0.004	1.047	1.064	0.002	0.594	1.065	−0.000	−0.098	1.065	−0.000	−0.028	1.066
	종교		0.020***	4.749	1.055	0.019***	4.764	1.055	0.022***	5.574	1.056	0.021***	5.500	1.056
	나이		−0.072***	−12.132	2.157	−0.070***	−12.031	2.157	−0.086***	−15.217	2.164	−0.087***	−15.453	2.167
	학력		−0.052***	−11.128	1.351	−0.039***	−8.362	1.362	−0.010*	−2.394	1.380	−0.010*	−2.401	1.382
	소득		0.113***	23.639	1.402	0.114***	24.192	1.402	0.116***	25.394	1.402	0.115***	25.345	1.402
	주택형태	단독주택	−0.008	−1.766	1.374	−0.010*	−2.317	1.375	−0.009*	−2.060	1.376	−0.008	−1.939	1.376
		아파트	−0.019***	−4.039	1.489	−0.020***	−4.194	1.489	−0.016***	−3.547	1.490	−0.016***	−3.507	1.490
	주거형태	자가	0.092***	12.867	3.150	0.083***	11.731	3.155	0.086***	12.605	3.156	0.086***	12.623	3.156
		전세	0.090***	13.184	2.893	0.086***	12.715	2.894	0.080***	12.243	2.895	0.079***	12.171	2.895
	혼인상태	기혼	0.095***	16.152	2.150	0.093***	15.877	2.150	0.084***	14.967	2.153	0.085***	15.052	2.154
		기타	0.039***	7.301	1.764	0.035***	6.589	1.765	0.030***	5.909	1.765	0.030***	6.041	1.766
	근무형태	정규	0.024***	4.113	2.161	0.027***	4.673	2.162	0.032***	5.751	2.163	0.032***	5.697	2.163
		비정규	0.001	0.263	1.884	0.003	0.595	1.885	0.006	1.261	1.885	0.006	1.174	1.855

종속변수:행복감			Step 1			Step 2			Step 3			Step 4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환경변수	주거환경		0.074***	14.610	1.588	0.076***	15.275	1.588	0.073***	15.182	1.593	0.072***	14.975	1.594
	경제환경		0.215***	43.268	1.517	0.199***	40.317	1.534	0.181***	37.779	1.547	0.181***	37.909	1.549
	사회환경		0.025***	5.009	1.612	0.288***	5.692	1.613	0.021***	4.402	1.615	0.022***	4.534	1.616
	교육환경		0.055***	11.071	1.542	0.050***	10.197	1.543	0.032***	6.794	1.551	0.032***	6.720	1.551
	교통환경		−0.009	−1.937	1.368	0.010*	2.311	1.394	0.011*	2.412	1.399	0.010*	2.360	1.400
	녹지환경		−0.137***	−30.745	1.228	−0.123***	−27.700	1.241	−0.090***	−20.893	1.267	−0.089***	−20.696	1.268
	문화환경		0.183***	37.939	1.425	0.178***	37.480	1.426	0.120***	25.531	1.504	0.119***	25.347	1.505
	거주지역	도심권	0.002	0.494	1.351	0.005	1.110	1.352	0.006	1.434	1.352	0.005	1.237	1.353
		동북권	0.008	1.555	1.931	0.013*	2.436	1.933	0.117*	2.183	1.933	0.011*	2.188	1.934
		서북권	0.007	1.478	1.490	0.008	1.756	1.490	0.009*	2.113	1.491	0.009*	1.991	1.492
		서남권	−0.002	−0.531	1.911	−0.000	−0.091	1.912	−0.002	−0.515	1.912	−0.003	−0.624	1.912
심리변수	계층이동		0.149***	34.389	1.160	0.137***	31.831	1.170	0.118***	28.157	1.183	0.118***	28.336	1.185
	여가생활인식		0.102***	22.721	1.252	0.107***	24.078	1.254	0.109***	25.269	1.254	0.108***	25.106	1.255
	자원봉사		−0.030***	−7.222	1.065	−0.029***	−7.057	1.065	−0.026***	−6.754	1.066	−0.027***	−6.899	1.067
	기부		0.120***	28.769	1.080	0.117***	28.254	1.080	0.090***	22.207	1.105	0.090***	22.341	1.105
상수			7.680***	22.443		11.488***	31.972		7.043***	19.724		7.146***	19.998	
F			738.1***			763.8***			863.3***			814.3***		
R^2			0.338			0.354(↑0.016)			0.398(↑0.044)			0.399(↑0.001)		
Adj, R^2			0.338			0.354			0.398			0.399		

주1: *p<0.05, **p<0.01, ***p<0.001

주2: 더미변수 성별(=여성), 종교(=무교), 주택형태(=다세대), 주거형태(=월세), 혼인상태(=미혼), 근무형태(=무직), 거주지역(=동남권)

[표 4-8]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단계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분산팽창요인)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4단계에서 사회갈등인식 1.128, 사회신뢰 1.291, 정부신뢰 1.371, '사회갈등인식×사회신뢰' 1.226, '사회갈등인식×정부신뢰' 1.207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제변수에 대해서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 1단계(Step 1) 해석

통제변수가 투입된 1단계에서는 성별과 단독주택, 비정규, 교통환경 및 거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환경(β=0.215, p<0.001)이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문화환경(β=0.183, p<0.001)과 계층이동가능성(β=0.149, p<0.001), 기부(β=0.120, p<0.001)이 순서대로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이(β=-0.072, p<0.001)와 학력(β=-0.052, p<0.001)은 각각 행복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와 학력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앞에서 확인한 것과는 다르게 행복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나이와 학력, 행복감 사이에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녹지환경(β=-0.137, p<0.001) 또한 행복감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만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에서 녹지환경의 경우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2단계(Step 2) 해석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β=-0.130,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갈등인식이 추가됨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단독주택과 교통환경, 거주지역 중 동북권 변수가 유의미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교통환경 변수의 경우에는 상관분석에서 사회갈등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회귀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 영향(β=0.010, p<0.05)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3단계(Step 3) 해석

조절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사회갈등인식(β=-0.095, p<0.001)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개인의 행복감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사회갈등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회갈등을 빈부격차, 불평등, 세대갈등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지(Haller & Hadler, 2006)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전반적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만 추가 투입한 2단계에 조절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투입한 3단계에서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모두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정도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정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개인의 행복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강민성, 2015)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과 <가설 2−2>가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신뢰의 경우 β=0.097(p<0.001)로 나타났으며, 정부신뢰의 경우 β=0.181(p<0.001))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부신뢰가 사회신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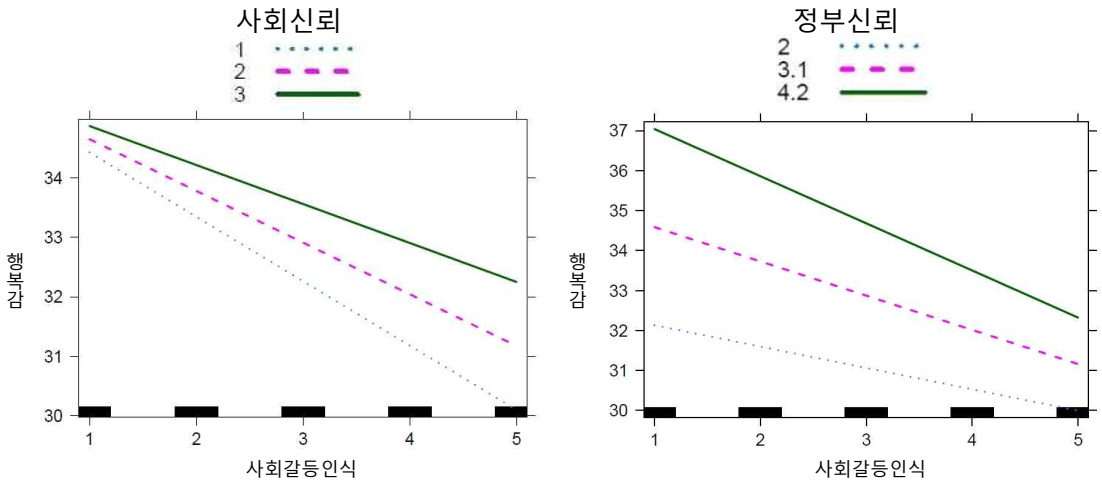
4) 4단계(Step 4) 해석

마지막으로 '사회갈등인식×사회신뢰' 상호작용항과 '사회갈등인식×정부신뢰' 상호작용항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4단계에서 사회갈등인식(β=−0.096, p<0.001)은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또한 정부신뢰(β=0.180, p<0.001)와 사회신뢰(β=0.099, p<0.001)모두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설을 다시 한 번 지지해주었다.

사회갈등인식×사회신뢰' 상호작용항과 '사회갈등인식×정부신뢰' 상호작용항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4단계에서 각 상호작용항은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갈등인식×사회신뢰' 상호작용항의 경우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β=0.018, p<0.001)을 미치는 반면, '사회갈등인식×정부신뢰' 상호작용항의 경우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β=−0.033,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신뢰의 경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반면에, 정부신뢰의 경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기존에 설정된 가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덜 영향을 미쳐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증폭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그림 4-1]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범례: 평균±표준편차(사회신뢰(평균=2.01, 표준편차=0.99), 정부신뢰(평균=3.13, 표준편차=1.07)).

[그림 4-1]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신뢰의 경우 사회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정부신뢰의 경우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의 미치는 부(-)의 영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독립된 변수로서는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조절변수로서는 차별적인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다만 조절효과가 기존에 설정한 가설과는 다르게 사회신뢰는 부(-)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정부신뢰는 부(-)의 영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신뢰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첫 번째로 거론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정부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회갈등인식에 대한 관리까지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정부신뢰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과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줄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으며,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과의 부정적 관계

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줄 것이라는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4단계에서 통제변수의 영향을 확인해보면, 성별과 단독주택, 비정규 그리고 거주지역 변수를 제외하고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변수에서 나이(β=-0.087)와 학력(β=-0.010)은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행복수준에서 다세대집단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주거형태의 경우는 월세보다 자가(β=0.086), 전세(β=0.0.079)순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였으며, 미혼보다 기혼(β=0.085), 기타(β=0.030)순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근무형태의 경우 비정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규직(β=0.032)은 무직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소득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β=0.115)을 미치고 있어 다른 무엇보다 소득이 개인의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적변수에서는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거환경(β=0.072), 경제환경(β=0.181), 사회환경(β=0.022), 교육환경(β=0.032), 교통환경(β=0.010), 문화환경(β=0.119) 모두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환경은 환경적변수에서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과 더불어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변수에서는 모든 변수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β=-0.027)를 제외하고는 계층이동(β=0.118), 여가생활인식(β=0.108), 기부(β=0.090)순으로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1년간의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 경험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대면활동 금지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을 확률이 높으며, 기존의 연구(강민성, 2015)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는 경력쌓기 등의 비자발적인 요소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도별 위계적 회귀분석 비교

다음으로는 연도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표 4-9]는 2013년, 2015년, 2017년, 2020년, 2021년 연도별로 주요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6] [표 4-9]

를 보면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인식은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언제나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β=−0.036), 2015년(β=−0.026), 2017년(β=−0.015), 2020년(β=−0.160), 2021년(β=−0.096) 모든 연도에서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다수의 사회갈등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장승진, 2011; 우명숙 외, 2013; 정해식 외, 2014) 및 가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정부는 시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갈등 발생 수준을 낮추거나, 시민들의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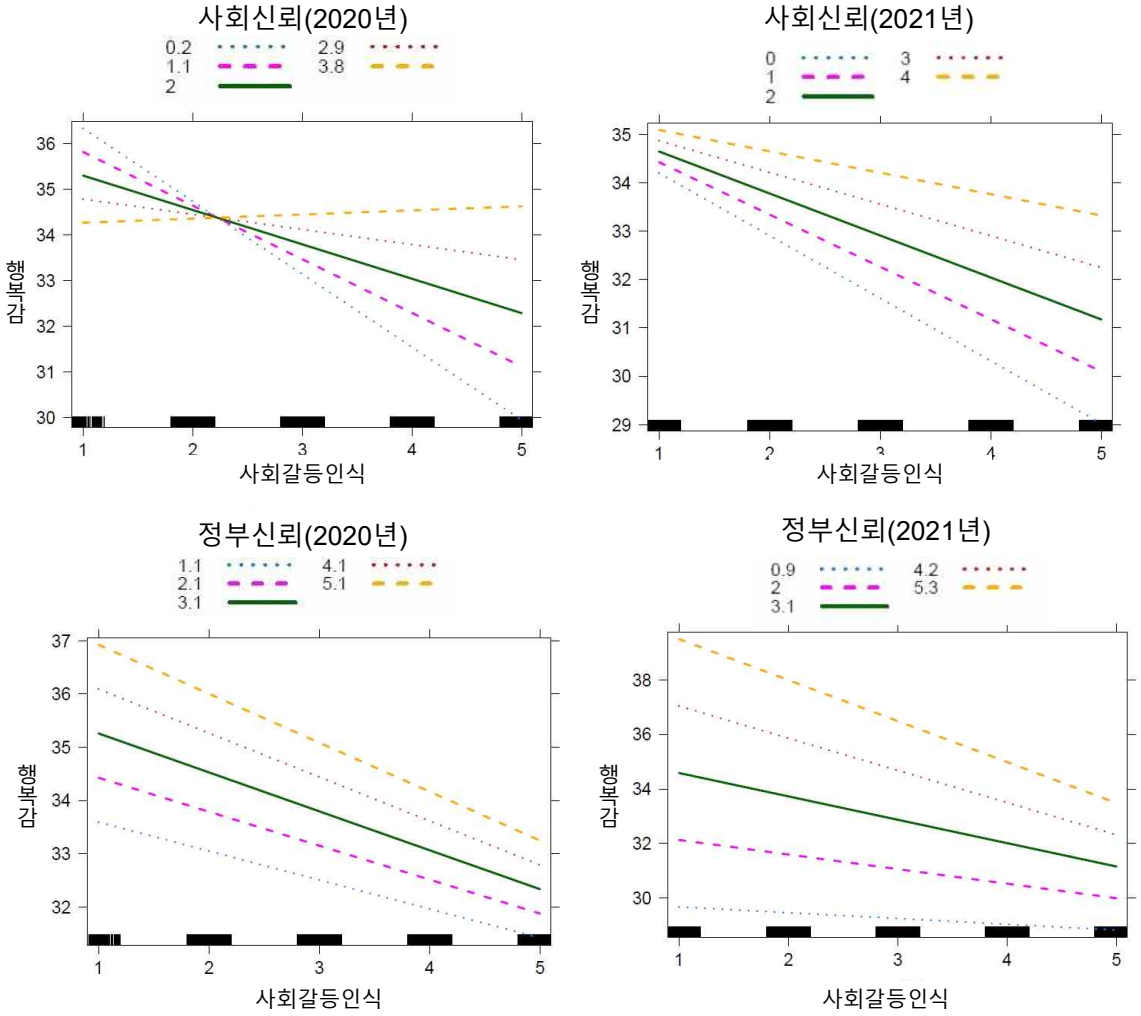
조절변수의 경우 정부신뢰는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β=0.052), 2015년(β=0.110), 2017년(β=0.093), 2020년(β=0.116), 2021년(β=0.180) 모든 연도에서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서울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선행연구 및 가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어, 시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다. 조절변수로서 사회신뢰의 경우 매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도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2013년(β=−0.017, p<0.001)과 2020년(β=−0.123, p<0.001)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강민성, 2015)와 마찬가지로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쳐 정부신뢰와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β=0.099, p<0.001)의 경우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쳐 사회신뢰의 경우 매년 행복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사회갈등인식×사회신뢰' 상호작용항의 경우 2020년(β=0.233, p<0.001)과 2021년(β=0.018, p<0.001)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인식×정부신뢰' 상호작용항의 경우 2013년(β=−0.0.018, p<0.001), 2020년(β=−0.054, p<0.05), 2021년(β=−0.033, p<0.001)의 경우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경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경우 그 효과는 차별적이라는 점 또한 확인되어 신뢰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6) 2019년의 경우 기존 가구원 조사에서 진행하던 '사회갈등인식'문항이 시민조사에서 진행됨에 따라 연도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4-2] 연도별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범례: 평균±표준편차

1. 2020년: 사회신뢰(평균=2.04, 표준편차=0.92), 정부신뢰(평균=3.13, 표준편차=1.00)
2. 2021년: 사회신뢰(평균=2.01, 표준편차=0.99), 정부신뢰(평균=3.13, 표준편차=1.07)

[그림 4-2]은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조절효과가 모두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2021년의 사회신뢰의 경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2020년의 경우 사회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연도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행복감		2013			2015			2017			2020			2021		
		Step 4			Step 4			Step 4			Step 4			Step 4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독립변수	사회갈등 인식(A)	−0.036***	−9.271	1.045	−0.026***	−5.768	1.164	−0.015***	−3.861	1.040	−0.160***	−11.021	1.071	−0.096***	−23.632	1.128
조절변수	사회신뢰 (B)	−0.017***	−4.062	1.173	0.000	−0.141	1.038	−	−	−	−0.123***	−5.999	1.171	0.099***	22.747	1.291
	정부신뢰 (C)	0.052***	12.310	1.210	0.110***	25.451	1.038	0.093***	22.616	1.079	0.116***	5.809	1.221	0.180***	40.000	1.371
상호작용	(A)*(B)	−0.004	−1.093	1.119	−0.002	−0.640	1.000	−	−	−	0.233***	10.711	1.131	0.018***	4.426	1.226
	(A)*(C)	−0.018***	−4.436	1.121	−0.005	−1.362	1.009	0.003	0.945	1.012	−0.054*	−2.323	1.131	−0.033***	−8.018	1.207
상수		17.387	55.769		25.673	77.793		15.160	48.555		16.151	26.326		7.146***	19.998	
F		536.3***			229.8***			647.9***			469.4***			814.3***		
R^2		0.2839			0.1467			0.3271			0.2789			0.399(↑0.001)		
Adj, R^2		0.2833			0.1460			0.3266			0.2783			0.399		
R^2 변화량	step 1	0.2798			0.1340			0.3189			0.2509			0.3384		
	step 2	0.2812(0.0014 ↑)			0.1349(0.0009 ↑)			0.3190(0.0001 ↑)			0.2603(0.0094 ↑)			0.3541(0.0157 ↑)		
	step 3	0.2835(0.0023 ↑)			0.1466(0.0117 ↑)			0.3271(0.0081 ↑)			0.2768(0.0165 ↑)			0.3984(0.0443 ↑		
	step 4	0.2839(0.0004 ↑)			0.1467(0.0001 ↑)			0.3271(0.0000 −)			0.2789(0.0021 ↑)			0.3994(0.0010 ↑)		

주1: *p<0.05, **p<0.01, ***p<0.001

주2: 2017년의 경우 사회신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주3: 2013, 2015, 2017년 고향인식도, 스트레스, 계층인식, 자부심 변수 추가

제5절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1. 사회갈등인식과 행복감에서의 사회신뢰의 중요성

연도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행복감에는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사회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정해식 외, 2014; 우명숙 외, 2013; 장승진, 2011; Graham, C. et al, 2006)의 결과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의 국민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Haller & Hadler, 2006)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4-2]의 2020년 사회신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신뢰의 증가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도록 방향성까지 변경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갈등이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의 사회신뢰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사회갈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경우에는 사회신뢰수준을 매우 높이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사회신뢰는 어떻게 사회갈등인식과 행복감 사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오히려 심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라 · 이숙종(2018)의 연구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겠다. 그들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신뢰는 이익·가치갈등(수도권·지방갈등, 개발·환경보존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종교갈등)에 대해서만 정(+)의 영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져오고 이념갈등(계층갈등, 보수·진보갈등, 근로자·고용주갈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사회신뢰의 경우에는 이익·가치갈등뿐만 아니라 이념갈등에 대해서도 정(+)의 영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의 우선순위[7]로 꼽히는 것이 진보·보수갈등(47%), 여야갈등(45%), 계층갈등(36%), 기업가·노동자갈등(31%)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념갈등이 심각하다는 점과 정부신뢰가 아닌 사회신뢰가 사회갈등과 정치참여 사이에서 정(+)의 영향을 강화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사회신뢰는

7)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 [집단별 갈등인식-2022년] 주요 집단간 갈등, 1년 사이 더 심각해졌다는 인식 증가(https://hrcopinion.co.kr/archives/22859)

사회갈등과 주장형 정치참여 사이에 정(+)의 영향을 강화하고, 이것이 정치효능감의 증가를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으나, 주장형 정치참여와 정치효능감, 행복감과의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만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정부신뢰의 연구에만 치중되었던 행정연구에서 사회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강민성(2015)의 경우 사회신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나, 다른 최근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행복(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3과 2020년의 Step 4에서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2021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Step 3)에 대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사회신뢰(β=0.091, p<0.001)는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사회적 참여소통 수단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여러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적으로 그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2015년이 그에 대한 과도기적 시기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2013년까지는 상호작용항 유무에 따른 Step3, Step4 모두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20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Step3의 경우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21년에는 상호작용항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신뢰가 행복감(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재형 외, 2021; 권준이 외, 2021) 또한 최근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신뢰에 대한 영향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대면하지 않고도 낯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거 정부기관의 영향이 극심했던 시대를 넘어 이제 개인 간의 영향력이 중요해지고, 행복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신뢰, 일반

신뢰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다. 차후 SNS이용량에 따른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할 경우 확인할 수 있겠다.

3. 정부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절효과로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감은 정부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지만, 정부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낄수록 행복감이 더욱 빠른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신뢰가 사회갈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는 몇몇 선행연구들(박창연 · 이충기, 2020; 이해규 · 김자림, 2021; 오민지, 2022)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정부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영라 · 이숙종(2018)의 주장처럼 정부가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여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높지만, 사회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은 그보다 더 커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갈등을 줄이고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절효과로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대해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제 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갖는다면 어떠한 차별적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202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2021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집단별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라 순차적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인식은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로 분석을 진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과 행복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예외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조절변수로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예외적인 선행연구와 달리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행복감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신뢰가 사회신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신뢰는 연도별로 언제나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신뢰의 경우에는 2013년과 2020년에는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다가 2021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영향력의 방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뢰유형이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신뢰는 영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수준의 상승은 사회참여를 촉발함으로서 사회갈등을 오히려 촉발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으

나, 오히려 사회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수준이 높을 경우 낮은 사람보다 행복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도별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언제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두 유형의 신뢰가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경우에는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신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2013년과 2020년, 2021년의 경우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신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의 경우에는 사회신뢰의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첫째, 우선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연도별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제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갈등에 대한 관리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갈등 및 시민들의 인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를 보았을 때 이미 서울시민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4점 내외로 서울시민 대부분이 사회갈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고, 어떠한 유형의 사회갈등이 시급한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특히 최근에 세대갈등과 남녀갈등에 대한 사회갈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갈등의 유형으로 이념갈등인 진보·보수갈등, 여야갈등, 계층갈등 및 노사갈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부터 이어져 온 고전적인 갈등이자 고질적인 갈등이라는 점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둘째, 기존 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 2013년의 경우 동일하게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도가 지

남에 따라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미치는 방향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갈등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신뢰가 참여를 촉진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연도가 지나면서 SNS에 따른 사회적 소통창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다고 추측해볼 수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신뢰는 행복감에 언제나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어떠한 경우에 사회신뢰가 행복감에 다른 방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연도별·시기별 사회신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차별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사회갈등과 행복감 사이에서 사회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신뢰는 사회갈등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의 영향을 나타나도록 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회신뢰의 수준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 2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회신뢰수준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인식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사회신뢰수준을 끌어 올릴 경우 국민들의 행복감이, 사회신뢰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의 증가와 각종 소셜미디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사회신뢰수준을 하락시키는 기사거리나 글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들의 경우에는 논란의 불씨만 지피고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글들은 사람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글 다음에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참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정부신뢰의 경우 신뢰수준이 높을 경우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지면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의 행복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신뢰는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 3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정부신뢰를 올리면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경우 국민의 행복감에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갈등은 국가가 발전함에 있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따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갈등에 대한 관리시 사

회갈등의 수준을 적정수준 유지하면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사회갈등과 더불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관한 정책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갈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따라 시민들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갈등의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사회갈등의 사례가 어떠한 갈등유형이며, 왜 발생했으며,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등 보도에 대한 매뉴얼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갈등에 대한 보도를 접한 후 단순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화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대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사회갈등을 세분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회갈등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조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회갈등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조화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사회갈등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할 경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신뢰,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연도별 비교에 있어서 모든 연도에 동일한 변수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연도별 비교를 함에 있어서 모든 연도에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첫째의 한계와 동일하게 서울서베이에서 매년도 동일한 구성과 내용의 설문지로 설문을 진행하지 않아 설문내용이 특정연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연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 변수를 설정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7년의 경우 사회신뢰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2019년의 경우 사회갈등에 대한 설문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비교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정확한 비교연구는 매년 동일한 설문에 동일한 변수를 기반으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차후 동일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동일한 설문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도별 연구자료를 통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갈등치유연구소, (2012). 갈등치유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이밍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3), 5-44.

———, (2012). 시민의 뉴스정보 이용이 호혜성 및 사회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론과 사회규범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8(2), 73-100.

강민성, (2015).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고대유, (2022).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 147-170.

국무총리실, (2010). 09년도 부처 갈등관리 실태 점검 · 평가 결과.

권준이·은재호, (2021). 신뢰와 정치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4), 79-112.

권혁주. (2016).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행정논총」, 54(2), 93-116.

김강민. (2011).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25.

김남두·김재홍·강상진·이창우, (200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소스 윤리학」

김남옥·석승혜·장안식, (2016). 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감소하는가?. 「사회와이론」, 28(1), 33-67.

김대중. (2019).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갈등의 유형별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협상연구」, 22(2), 69-102.

김대중·오영석·왕서정, (2018).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별 원인과 대응방안의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4), 23-57.

김동규, (2000). 사회갈등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 찾기: 사회 갈등에 관한 보도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0(9), 53-82.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2), 415-442.

김명수·김혜원·한영석·차경호·임지영.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

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김민정·김윤정, (2021). 코로나 불안감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 건강성의 조절효과.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7(11), 165-176.
김민혜·이승종, (2019). 시민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28(4), 91-123.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김보람·김매이, (2021). 여가활동 참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 결정요인. 「한국여가문화학회」, 19(3), 71-91.
김상곤·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김윤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9(9), 75-90.
김재형·남태우(2021). 서울시민의 문화 환경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일반신뢰와 공적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도시행정학보」, 34(4), 1-22.
김지원·구교준·김동욱·고은정(2021). $H=XZ^2$, 행복 방정식을 풀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리뷰. 「정부학연구」, 27(3), 85-119.
김태홍 외, (2005).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호정. (2009). 일반논문: 갈등과 신뢰 및 조직효과성의 관계 . 「한국행정학보」, 43(1), 97-119.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류희찬 외, (2013). 중학교 수학 2. 「서울: 천재교육」, 212.
박상완. (2017). 신뢰의 개념 구조 및 교육행정 연구에의 적용. 「교육행정학연구」, 35(2), 123-160.
박창연·이충기. (202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직업불안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9(8), 43-57.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1-17.
박희봉·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105-128.

박희봉·이희창·전지용·강제상·임명수·김태순·서승현, (2012). 신뢰 유형별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행정논집」, 24(1), 77-103.
배광빈·류인권. (2020).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2), 174-193.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
손병석, (2017).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eudaimonia)과 외적좋음의 관계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118, 117-208.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신준식. (1996). 「종교와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의 종교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 261-281.
오경민·박홍식, (2002). 정부 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5.
오미옥, (2020). 사회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2(3), 47-66.
오민지. (2022).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4), 63-89.
오민지·이수영, (2017).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9(3), 489-508.
우명숙·김길용·조병희·유명순. (2013).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가: 5개국 개인 삶의 만족과 사회갈등해소역량. 「국제지역연구」, 22(2), 87-120.
유민상, (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희정·이숙종.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윤순진. (2018). 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18, 49-98.
윤인진. (2011).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 2007년과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분쟁해결연구」, 9(2), 135-166.
윤종설, (2014). 공공갈등 발생요인에 따른 갈등예방·대응지표 구축. 「정책개발연구」, 14(3), 37-59.

이 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이두희, (2021). 한국인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과 신뢰: 대인신뢰와 공적신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래혁. (2021).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1(6), 71-80.
이수인. (2018).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43(3), 167-174.
이양호·지은주·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이영라·이숙종. (2018).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2), 159-190.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4(2), 48-72.
이지은·강민성·이승종,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이해규·김자림, (2021). 코로나 19 불안이 루머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한국PR학회」, 2021(05), 97-97.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임동진, (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임동진·박관태, (2017).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뢰와 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6(4), 87-123.
임준홍·홍성효, (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지역을 사례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2(2).
임현철·은재호, (2020).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가?: 공정성, 소통, 사회갈등의 삼각관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1-25.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장승진. (2013). 일반논문: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189-214.
장영수, (2017).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고려법학」, 0(85),

81-108.
장용진, (2013).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189-214.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전영평, (2005).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의식 및 정책수요 조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2-05.
정미애·김효진. (2022). 부모의 공동양육 정도, 부모의 행복감, 부부갈등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6(2), 205-227.
정용국·김세중·이은주·황하성, (2014). 사회갈등 보도의 선정성이 수용자의 정보처리 과정, 뉴스 품질 및 현실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119-119.
정태호, (2006).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4(4-2), 113-154.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사회통합 국민 인식. 「2016」, 2016, 1-381.
조명한·김정오·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조원빈, (2016).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19(1), 209-241.
주재선, (2007). OECD 포럼과 행복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6), 80-86.
진혜경. (2016). 청소년의 사회갈등 인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소속감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2(1), 283-306.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킹스컬리지, (2021).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통계청. (2021). 「2020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2). 「2021(제 9차)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5).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1), 545-561.

홍덕화·구도완,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7-47.

2. 외국문헌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rions of Life Quality.

Argyle, M. (2003). 18 Causes and Correlates of Happines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353.

Blind, P. K. (2007).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literature and emerging issues." In 7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pp. 26-29)

Bjørnskov, C. (2008).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1), 43-62.

Cameron, P. (1995). Mood as an indicant of happiness: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ist, 31, 117-124.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Campbell, S. (1996). Green Cities, Growing Cities, Just Cities? Urban Planning and the Contradic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iciation, 62(3), 296-312.

Coser, L. A. (1967). Continuities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a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Dirks, K. T., & Ferrin, D. L. (2001). The role of trust in organizational

settings. Organization science, 12(4), 450-467.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la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New York. .
Graham , C. & Felton, A.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107-122.
Graham, C. (2012). The pursuit of happiness: An economy of well-bin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Haller, M., &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 Research, 75(2), 169-216.
Hellevik, O. (2003). Economy, values and happiness in Norwa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3), 243-283.
Helliwell, J.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ing, 20(2), 331-360.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34-C45.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1-1288.
Kriesberg, L. (2007). Constructive conflicts: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 Rowman & Littlefield.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orm a New Science. London: Allen Lane.
Moore, C. W. (2003).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3r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Ostrom, E., & Walker, J. (2003). Trust and reciprocity: Interdisciplinary lessons for experimental research. Russell Sage Foundation.
Putnam, R.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Robbins, S. P. (2003). Organizational behavior(7th ed.). New York: Prentice-Hal.

Rodrik, D. (1998). Who needs capital-account convertibility?.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55-65.

Sirgy, M. J., Efraty, D., Siegel, P., & Lee, D. J. (2001). A new measure of quality of work life(QWL) based on need satisfaction and spillover theo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3), 241-302.

sumner, W. G. (1960). Status in thr Folkway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72-73.

Tokuda, Y., Fujii, S., & Inoguchi, T. (2010). Individual and Country Level Effects of Social Trust on Happiness: The Asia Barometer Surve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hy, 40(10), 2574-2593.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2(1), 91-125.

Verme, P. (2011).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negqu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 111-127.

White, J. M. (1992). Marital Status and Well-Being in Canada An Analysis of Age Group Vari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3(3), 390-409.

Whiteley Paul F. (2000).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Political Studies, 48(3), 443-466.

Abstract

The Effect of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on Happines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trust and government trust-

Jeong Woo Se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effect of perception of social confli ct on happiness and to confirm the effect of social trust and government tr ust as control variables. Social conflict is a factor of conflict and has a rev erse function that causes friction and conflict with people, but rather contai ns a net function that allows in-depth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nation al development, so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direction in managing soci al conflict. Therefore, by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trust a nd government trust, we would like to find a way to improve happiness thr ough the level of trust in a situation where the level of social conflict is m aintained constant. To this end, the information on the Seoul Survey Urban Policy Indicator Survey conducted in 2021 was used to analyze, and additi onally, 2013 and 2015, 2017 and 2020 were analyzed by yea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all year comparis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an independent variabl

e, had a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a dependent variabl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serious the social conflict is perceived, the more happiness decreas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both social and government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but the effect of the two trust types on happiness was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year. Specifically, in the case of government trust, it was found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all years. In the case of social trus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2021, but it was found that it had a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in 2013 and 2020.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trust has a moderating effect that alleviates the negative effect of social conflict perception on happiness, while government trust has a moderating effect that rather strengthens the negative effe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ocial trust, in 2020,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an increase in the level of social trust is essential in Korea, where the level of recognition of social conflict is hig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the necessity of managing social conflict perception was suggested by confirming that social conflict perception always had a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Second, in the case of social trust, it was suggested that the effect on happiness varies depending on the period, so that it should be different by year and time when implementing the policy on social trust. Third, by confirming the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trust, the importance of social trust was suggested in administrative research focused on government trust.

keywords : Happiness, Social Conflict, Social Trust, Government Trust, Moder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14-23503